

신강협. 2019. “제주지역에서 평화권 상상하기” 『인권연구』 2(2): 143-158.
Shin, Kanghyob. 2019. “Imagining the Right to Peace in Jeju Island”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2): 143-158.

[현장논단]

제주지역에서 평화권 상상하기*

신 강 협**

— 목 차 —

- I.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다: 평화권과 발전권 침해의 기록
- II. 제주 제2공항 논란을 낳다: 환경파괴와 군사기지화 논란 등장
- III. 평화권이 필요하다
- IV. 제주에서 평화란?: 평화주의와 평화체제의 구축
- V. 맺으며

I.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다: 평화권과 발전권 침해의 기록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다

2007년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세계인권선언의 어느

* 본 원고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제주지역에서 왜 평화권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권을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생각의 서사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진지하게 평화권을 탐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서언이기도 하다.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연구소장

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4월 26일 마을 임시총회의 해군기지 찬성 의결(단 87명의 참석자가 박수로 찬성 의결) 이후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한국의 사법체계와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강정마을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임을 부정할 수 없다.¹⁾

결국 취약한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큰 당근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낯선 이름의 유인책을 꺼내 들었고,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세워나갔다.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마을에 대한 발전계획 지원은 추후 ‘마을공동체회복사업’으로 명명되었다.²⁾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해군기지가 건설의 주된 목적이다 보니 명분으로서 서둘러 계획에 들어간 발전사업은 그저 들러리 일뿐이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절차도 없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구기관은 어떻게 발전계획의 규모를 확대하여 명분을 좀 더 과대 포장할까에 골몰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강정마을 발전계획수립 용역보고서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강정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마을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가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마을 보건소 건립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보건의료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특혜성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 관사로 이어지는 마을 길 확정 정비 사업이 과연 마을을 위한 사업일까? 마을 농업관련 지원사업은 마을 전체 주

1) 오마이뉴스. 2012년 3월 16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유치결정? 다 거짓말이다”

2) 2016년 9월 제주연구원(www.jri.re.kr)은 강정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을 돕는 것인지 개별 농민을 지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마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는 했지만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있기에, 결국 이 사업은 차별적 지원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에 반목이 싹트기도 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 생태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업이 전체 마을 환경과 제주도의 연관 산업과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어떤 사업적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지 않았다. 애당초 발전계획은 해군기지의 명분이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덩치 큰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 현역 군인은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면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수 조원으로 계산하여 발표하기도 한다.³⁾ 이는 제주해군기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연관분석’이라는 것은 투입량에 따른 단순(삭제) 산출량 계산 방식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많이 투입할수록 얼마나 많이 산출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바꿔말하면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나 산출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산출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입량이 중요하다. 과연 정말로 정부

3) 노준현·구영완·김승년(2008)은 연구의 초록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산업연간표를 이용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 1,430억원, 취업유발 8,856명, 소득유발 3,113억원, 부가가치유발 5,056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지건설의 경우 생산유발과 소득유발은 제주발전연구원(2005) 대비 높게, 취업유발은 낮게 추정된 반면 기지운영은 제주발전연구원 결과보다 효과가 낮은것으로 추정된다. 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생산유발 계수는 전국 생산유발 계수에 비해 높게 추정된다. 3)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문별 파급효과를 보면,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등에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힌다.

4) <http://jejunbase.navy.mil.kr>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량에 대한 가정은 생략된 채 산출량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껍데기 명분 만들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것이었다.

더구나 지금 해군기지 명칭에서 보듯이 해군기지의 정당성이 군사 전략적 형태로서 도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민관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해군기지를 위장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민간 크루즈 관련 사항은 구체적 타당성 조사나 제주도(도의 환경, 제주도민들의 욕구 등)의 기본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규모만 키워 명분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속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되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여, 해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을 겉으로만 내세우려 실제로는 도외시하여 전적으로 군사기지로 사용하려 한다는 음모론적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실제의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뚤음’인 셈이다. 이러한 힐난이 신경 쓰여서 정부당국이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3월 영국 선적의 퀴메리 2호 크루즈가 강정항에 처음으로 입항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크루즈 사업의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결국 무늬만 민관복합항 이었다는 것만 입증된 꼴이 되고 말았다.

경제적 이득으로써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조치는 군사주의적 정책에 마을 발전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마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⁶⁾

2. 해군기지, 이중으로 환경을 파괴하다.

5) 제주의 소리. 2019년 7월 16일. “크루즈 없는 강정 크루즈항”

6) 유엔 발전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는 “발전의 주체는 인민이고, 인민이 주체적 참여자이자 수익자여야 하며, 발전의 이익은 그들의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한다. 또한 준비축소로 확보되는 자원은 포괄적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구름비 바위에 대한 발파 작업은 이 해군기지 건설이 환경에 대한 파괴적 작업임을 상징적으로 보는 주는 사건이 되었다. 붉은발 말뚝계 이야기도 있고, 아름다운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파괴되었다.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올레길 제7코스는 그렇게 코스 한가운데에 엄청난 무기의 집합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보전지역의 생태계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고 숨 막혀 사라졌는지 모른다. 공사과정의 온갖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단기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종종 강정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핵잠수함의 폐기물들은 처리 절차나 방안이 전혀 없다. 미 군사기지화의 문제도 문제지만 군사기지의 보안은 제주도로 들어오는 핵연료 쓰레기의 반입 여부조차 감감이로 만들고 있다.⁷⁾ 실제 군사기지에 대한 환경감시권한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실효성이 있거나 한 것일까? 이 뿐만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강정마을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태생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만 계획된 사업들은 강정마을의 생태학적 구조와 의미, 그리고 그 활용방안을 단순하게 화폐 투입량과 산출량으로 포장하기 위해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환경 생태적으로 오히려 강정마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강정하천을 이용한 사업이나 자전거 투어는 역시 강정 생태계를 이용한 사업이었지만, 이도 역시 개발사업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해군기지는 강정마을의 환경 자체를 근본부터 파괴하면서 환경의 풍광부터 환경생태계 내부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들의 환경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제주의 소리. 2017년 11월 23일. “이젠 핵 잠수함까지 “제주해군기지, 내놓고 美 군사기지화”

3. 해군기지, 공동체를 파괴하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적 동의를 유인하기 위한 발전 계획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배·보상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놓게 된다. 기존에 유지되고 있었던 경제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상호부조의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 안에서 재설정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같이 조상제사를 지내던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악화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일치된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해군기지에 대한 마을의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냈다. 2007년 6월 발생했던 마을총회 투표함을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해녀들이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과 해군이 뺨히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2019년 경찰의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은 강정마을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확인한다.⁸⁾ 또 다른 한편, 강정마을 사람들은 해군기지 사업을 볼 모로 조금의 경제적 이익이라도 더 보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해군기지는 제주도 남쪽 어느 즈음에 있던 조용한 시골마을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마을 공동체는 심한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분열과 파괴의 트라우마가 마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 공동체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생활은 이전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칭

8) 한겨레. 2019년 5월 19일. “해군, 제주기지 건설 위해 강정마을 주민투표함 탈취까지 개입했다”

이 아닐까 싶다.⁹⁾ 자신들이 분열을 조장하였기에 그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는 2016년 7월 1일 결의안 32/28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안한 ‘평화권 선언’을 채택하여 승인했다. 유엔 평화권 선언은 평화를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화가 촉진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분쟁이 해결되며 사회경제적 발전이 보장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참여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⁰⁾ 이를 두고 생각해보면, 해군기지 자체가 강정마을 사람들을 전쟁이라는 폭력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었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통해 강정마을 사람들의 평화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II. 제주 제2공항 논란을 낳다: 환경파괴와 군사기지화 논란 등장

1. 제주 제2공항 건립 추진, 도민 의사결정권의 문제

2015년 11월 10일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 성산일대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다. 원래 제주 제2공항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주 지역의 공항 수용능력의 확장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여러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 순위가 뒤로 밀리다 최종적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 11월 1차적으로 제2공항 부지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 과정은 없었다.¹¹⁾ 이 문제는 결국 제2공항 관련 입지

9) 경향신문. 2019년 3월 21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부풀려졌다”

10) 유엔 평화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2016. 유엔총회.

11) 프레시안. 2015년 11월 12일. “제주 2공항 후보지 ‘깜짝 발표’...정작

선정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된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어떠한 정보 제공도 없었고,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제주도는 주민들과 협의 절차도 대략 생략함으로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정보권,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제2공항에서도 취약한 정책의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공항 주변의 에어시티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책, 특히 제주에서 국가 정책의 시행이 이해당사자와 거주당사자 등 정책의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일까? 결국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대리하게 된 소위 전문가들의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요구받게 된다. 이어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검토하는 재조사 용역이 발주되는 지경에 이르렀다.¹²⁾ 절차적 투명성 없이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재조사연구용역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최종결론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만다.¹³⁾ 국토부는 재조사검토위원회의 활동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의 권리 행사는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요구는 제주도민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이고, 자신들의 재산과 환경, 그리고 발전에 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웃는 이들은?”

12) YTN. 2018년 7월 2일. “제주 제2공항 건설 타당성 재조사·연구용역 시작”

13) 미디어제주.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권고안 도출 불발”.

2. 제주의 환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생존의 권리

제조사검토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제2공항 입지선정에 관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졌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주의 오름을 깎아내야 한다든지, 지하 동굴, 습골 존재 문제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근래에 논쟁적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역시 제2공항의 연계도로 확보의 일환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제주의 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소비재로 둔갑시키거나, 제주 지역 자체를 관광 상품지로 보는 지역 차별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을 이용하여 개발 이익을 확대하려는 이 정책이 오히려 근본 환경을 파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 제주의 생존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넘쳐나는 오·하수와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린 제주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면 관광객들은 제주의 자연이 아니라 최신식의 멋진 제2공항을 관광하러 올지도 모를 일이다.

유엔은 1986년 <유엔발전권선언>의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중략)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

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중략)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하략).”(전문 중에서)

발전에 있어서 주체는 제주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주 사람이 참여자이고 수익자이며 행위자이다. 그리고 발전은 제주 사람들의 생존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제주지역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구성하는 권리로서 행해져야 한다.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변방의 권리가 다시 복원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권리로부터도 소외되었던 제주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로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전문과 더불어 <유엔발전권선언> 제1조 2항, 제2조 1항은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3. 또다시 군사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한편, 유엔의 발전권 선언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전문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남부탐

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제주지역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¹⁴⁾

<유엔발전권선언> 제7조는 군비축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선언하고 있다. 군비축소가 사람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명분으로 군사기지를 늘리는 방향은 모든 사람들의 발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권리의 역사에 대한 퇴행적 행위임에 다름이 없다.

Ⅲ. 평화권이 필요하다

1. 또 다시 평화권이 필요하다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관광미항이라고 알려진 군사기지들도 실상을 살펴보면, 그나마 지켜낸 자연 환경으로 이룬 성과가 많고, 군사기지 폐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괌의 경우, 섬의 30%가 넘게 미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곳에 대한 원주민들의 권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괌의 주민들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군사기지가 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상주인구가 증가로 경제규모가 확대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미군기지를 방문하려고 괌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군사기지의 경제적 성과가 널리 홍보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군사주의 이념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명분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국가의 안정된 폭력구조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14) 노컷뉴스. 2019년 9월 5일. “공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 논란”

군사기지가 경제발전 계획을 조장하거나, 경제발전 계획에 묻어서 군사기지 건설을 시도하려는 것이 관성적 국가 권력의 행위이다. 그러한 권력 행위가 정규적이거나 어떤 하나의 사회적 흐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제주에서 국가권력은 그러한 전철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발전 계획이 빈 깡통이 되어도 군사기지는 남는다. 적어도 군사기지는 환경의 파괴와 전혀 무관하게 상존할 것이며, 오히려 환경의 파괴, 사람들의 평화로운 생존권의 약화는 군사기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환경이 다 망가져 버린 쓸모없는 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쓰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을까?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발전과 환경파괴, 그리고 군사기지는 제주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제주 사람들의 온전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상적 명제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주에서 인간다운 삶의 구조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다. 개발에 의한 파괴와 훼손으로서 인간적 삶의 환경들이 소비되고 고갈되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전권의 실현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권이 필요하다.

2. 일상에서 평화가 움터야한다: 군사주의의 친근함, 제주군함제 개최

2018년 10월 제주해군기지 앞은 떠들썩했다. 군함제 반대 시위자들과 군함제 참여자, 경찰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군함제에 참가하려는 해외 주요 인사들은 반대 시위자들의 거친 항의를 거쳐야 겨우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해군기지 옆 어느 작은

출입구를 통해 반대 시위자들 몰래 입장해야 했다. 촛불집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리고 해군과 여러 보수 세력과 만나며, 해군기지가 얼마나 훌륭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지를 과시하였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목직한 기관포의 방아쇠를 잡고 신나는 미소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원래 군함제 개최에 애당초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로 오인하게 될 수 있는 군사 행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참모진을 동원하여 이미 의결된 사항임에도 일부 주민들을 사주하여 군함제 관련한 재의결을 유도하고 결국 동의를 얻어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 방문하여 군사기지 찬성파가 다수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제발전 등 지원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함상에서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고 대양 해군을 언급한다. 유치원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놀러 온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평화의 섬은 사라지고, 대양해군을 짊어진 화폐적 발전이 사람들을 호도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일상의 평화가 군사적 무기에 의해 지켜진다는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신의 방어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제주 군함제를 통해 필자는 일상을 파고든 군사주의 무서운 면모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천진난만한 고사리 손으로 부여잡은 그 기관총 한발이 한순간에 수십명의 생명을 관통할 수 있음을 그 아이들은 알 수 있을까? 일상으로부터 평화주의적 관점과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IV. 제주에서 평화란?: 평화주의와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 평화학자 서보혁(2019)은 『한국의 평화학 탐구』에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크게 한반도의 근원적 모순으로 작동하고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평화주의 관점에서 평화통

일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전자에 기반을 두어 생각해보면 제주는 한반도 통일이 되면 현재 제주의 군사지역화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제주는 단지 남한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북측, 그리고 어쩌면 ‘민족의 안보’라는 짐까지 짊어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안보적 중요성이 그만큼 급증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2016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평화의 권리선언(A/RES/71/189)을 채택한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평화권 논의가 많이 침체 되어 버렸다. 2012년 작성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보고서(2012.6.18-7.6)에서 제출된 평화권 초안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평화권이 2016년 12월 유엔총회 이후 왜 논의 자체가 침체되었는지 짐작이 간다. 2012년 초안은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를 다루면서, 발전 뿐만아니라 인권교육과 군축의 문제, 국가의 책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결의안은 단 4개의 조항으로 아주 포괄적이면서 구체성이 거의 없는 선언문에 불과했다. 국가 권력기구의 속성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평화가 권리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현실이다.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평화권 실현을 위해서 한반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평화주의적 전환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태평양 전쟁의 일본 본국 방어기지로서 체험했던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작게는 신생 독립국가 권력의 혼란, 크게는 세계적 이념의 대립 속에 벌어졌던 4.3의 잔혹한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면서 제주는 이제 그만 군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여 군사주의의 살상무기를 대체할 평화주의적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제주도 내에서 군사주의 문화의 확산을 막고,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평화

활동가들과 많은 연구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평화지대, 제주에 있어서는 제주평화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방식부터 평화주의로 다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러한 노력이 인간의 삶 또는 생존권을 갉아먹는 파괴적 발전을 막아내고, 군사주의에 기반한 군사기지를 평화의 지대로 전환시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V. 맺으며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은 다수가 시범사업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정책적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주도는 이용되고 소비된다. 관광지로서 상품화되고 소비된다. 안보의 목적으로 파괴되고 이용된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제주도 지역의 저항권은 정부를 향한 돈 투정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억압된다. 공식적 정책은 흔히 엄청난 규모의 파괴적 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의 포섭적 시혜가 숨어 있다. 제주지역 사람들의 자기 본래적 욕구는 애당초 소외되었고, 제주는 그렇게 점점 자신의 색을 잃어가고 있다. 필자는 점차 제주지역의 인간다운 삶이 몇몇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우리 공동체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단순히 제주에서 해군기지 철수의 문제로 끝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 평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목표로 설정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는다. 자본주의적 풍요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지 않는 한, 군사주의가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인식이 평화주의적 인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해군기지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언젠가 공군기지가 들어 설 수 있음을 깨닫는다.

참고문헌

1. 학술자료

노준현·구영완·김승년 2008.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연구학회』 08. 105-131.

2. 문헌자료

서보혁. 2019. 『한국의 평화학 탐구』. 서울: 박영사.

3. 국제인권문헌

유엔 발전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유엔총회
유엔평화권 초안(A-HRC-20-31_en). 2012.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평화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2016. 유엔총회.

4. 신문기사

경향신문. 2019년 3월 21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부풀려졌다”

노컷뉴스. 2019년 9월 5일. “공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 논란”

미디어제주.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권고안 도출 불발”.

오마이뉴스. 2012년 3월 16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유치결정? 다 거짓말이다”

제주의 소리. 2019년 7월 16일. “크루즈 없는 강정 크루즈항”

제주의 소리. 2017년 11월 23일. “이젠 핵 잠수함까지 “제주해군기지, 대놓고 美 군사기지화”

프레시안. 2015년 11월 12일. “제주 2공항 후보지 ‘깜짝 발표’...정작 웃는 이들은?”

한겨레. 2019년 5월 19일. “해군, 제주기지 건설 위해 강정마을 주민투표함 탈취까지 개입했다”

YTN. 2018년 7월 2일. “제주 제2공항 건설 타당성 재조사·연구용역 시작”